

사설

‘허위출장서’로 여행 다녀온 복구 의원들

의장까지 포함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허위출장서를 내고 주민 혈세로 사적 여행을 다녀온 기막힌(?) 사실이 드러났다. 고점례 광주시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건안 운영위원장 등 4명이 그들이다. 고 의장과 이들 3명의 의원들은 통영시의회 방문을 명분으로 출장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6-27일 여행을 떠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고 의장과 김 운영위원장의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를 포함 44만1,600원, 함께 간 직원 3명에 대한 경비 63만 2,400원 등 총 107만4,000원이다. 107만4,000원의 혈세가 공식 출장비로 지출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통영시의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이들은 통영시의회 방문은 커녕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시 의회 관계자는 “광주시 북구의회 의장단 방문 계획은 서로 논의된 바도 없으며, 그런 공문

이 오간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혔다. 확인 결과 고 의장 등은 통영 관광지로 유명한 동피랑 벽화마을과, 서파랑 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허위 출장서를 내고 주민혈세를 타내 사적인 여행을 즐기고 돌아온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혈세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외려 혈세 편취에 앞장서다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다. 이런 의원들 때문에 성실하게 의정활동으로 지출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통영시의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확인 결과 이들은 통영시의회 방문은 커녕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시 의회 관계자는 “광주시 북구의회 의장단 방문 계획은 서로 논의된 바도 없으며, 그런 공문

또다시 태풍 피해에 우는 광주·전남 들녘

광주·전남 들녘이 또다시 태풍 피해에 울고 있다. 곳곳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계속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전남에서만 주택 83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277가구가 긴급 대피했다. 완도 노화에서 58가구, 여수 초도 22가구, 목포 삼향 27가구, 고흥 도화 1가구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다. 전남 전체 농경지(15만 4,091ha)의 0.6%인 914ha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완도가 201ha, 보성 190ha, 무안 130ha, 고흥 100ha, 여수 70ha 등이다. 벼도복(쓰러짐) 피해 면적도 급증했다. 보성에서 480ha, 강진 132ha, 해남 110

ha, 장흥 55ha, 신안 38ha, 고흥 20ha 등 총 846ha(전체의 0.5%)에 달한다. 이와 함께 강진 병영성 성곽 일부(24m) 붕괴와 완도, 진도, 고흥, 보성 등에서 도로 21개소, 장흥 두암천 제방 일부(20m)가 유실됐다. 담장, 공사장 가설물 등 시설물 피해 신고도 40여건에 달한다. 피해규모는 조사에서 주택 83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277가구가 긴급 대피했다. 완도 노화에서 58가구, 여수 초도 22가구, 목포 삼향 27가구, 고흥 도화 1가구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다. 전남 전체 농경지(15만 4,091ha)의 0.6%인 914ha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완도가 201ha, 보성 190ha, 무안 130ha, 고흥 100ha, 여수 70ha 등이다. 벼도복(쓰러짐) 피해 면적도 급증했다. 보성에서 480ha, 강진 132ha, 해남 110

특별기고



정정래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

중기-지자체 상생발전 토론회 참석 후기

달성에 납품하고 있거나 조달청 등록을 희망하는 관계자들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견의와 질의도 함께 이뤄졌다. 토론회 진행은 한국조달 연구원 공공구매 연구팀장의 기조발제와 정부 측 인사들의 현 정부에서의 조달정책과 지방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였으나 지역민의 수준에서는 진입의 장벽이 높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을 시행하는 발주관서 관계자들의 전문성은 공무원의 업무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토론회의 본래 취지는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나 구매, 계약 시 우선해서 채택하고 더 많은 지역 업체를 발굴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거나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첫째는 담당공무원들이 최소 1-2년내 보직이 변경됨으로써 업무파악을 넘어진 취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입 보직자는 법의 범위 내에서만 운신하거나 진입자의 관례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둘째는 발주관서 실무담당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취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추후 감사원 감사 등의 외풍을 막아줄 백 그라운드와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은 확고한 운영방침을 제시하고 임기중 가시적인 성과를 얻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지자체 운영의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 시, 도의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확인 점검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보직변경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다수 광급공사는 조달청을 통한 조달 자재로 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술력, 정보력, 자본력에서 앞선 대기업이나 수도권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지역 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 중기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우수 지역 중기 제품 발굴에 앞장서고 발굴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경영컨설팅, 언론홍보 등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하는 원도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사 설계 시 특정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 중기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업무지침 등을 지자체에서 시행함으로써 실효성 담보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관 발주의 경우 지역업체 하도급 70% 이상, 지역생산자재 및 인력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상태다. 민간공사(아파트 건축 등)의 경우도 인, 허가 시 지역생산자재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일정 부분 의무 활용(쿼터제 도입)에 대해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공사비가 2조원이 넘는 공사가 두 건이 시행되고 있다. 하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총 공사비 2조 1,7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다른 하나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2017년 8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총 공사비가 약 2조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대미문의 대형공사라 지역경제발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우리 집 앞에서 이뤄진 공사에 우리는 참여자가 될 것인가? 방관자가 될 것인가?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시·도와 의회가 적극 나서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해보는 건설 관련 토론회를 한 번쯤은 개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고



이정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양봉산업의 위기와 극복방안

은 벌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봉독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벌꿀로써 2017년 전체 양봉산물 생산액 2,288억원 중에서 54%에 해당하는 1,228억원을 차지했다. 이외 프로폴리스가 약 22%인 500억원 정도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벌꿀 생산액은 2016년 기준 3,981억원이고, 마누가 꿀로 유명한 뉴질랜드의 전체 벌꿀 생산액이 약 1,000억원 규모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양봉산업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양봉산업의 기반이 내실 있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양봉 사육 군수는 240만 군수로, 미국의 양봉 군수 267만 군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의 면적이 남한 면적보다 약 100배 넘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꿀벌 마릿수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는 바로 군당 생산량이 미국보다는 크게 낫다는 결과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천연꿀 생산량은 전년 대비 51.9% 감소한 5,395t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여름 가뭄 및 미국 선별벌 폐해로 아까시나무의 꽃대 형성이 부진했던

상태에서 2018년 4월 초에 아까시나무 꽃 개화 전 고온 현상(4월 10일-20일 기온 20-30°C)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까시나무 잎과 꽃대가 비정상 발육한 상태에서 저온 현상(4월 23일-27일 기온 5°C-5°C)이 발생해 잎과 꽃대가 병화로 손실되었으며, 살아남은 꽃대가 병화로 손실되며(평년 대비 50% 감소)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꽃송이 숫자는 평년의 40%에 불과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아까시나무 꿀 채취 시기인 5월에 잦은 강우와 저온 현상으로 꿀벌 바이러스 질병 발생이 증가해 꿀벌 폐사로 아까시 꿀 생산량이 급감했다. 그 결과 2018년 양봉농가 조수입은 전년보다 38.1% 감소한 4,002만원, 순수득은 208만원에 불과해 농가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봉업계에서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국회 공천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꿀벌의 직접 생산품인 벌꿀보다는 화분 매개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2016년 화분 매개 수익은 3억 5,422만 달러(약 4,111억원)로 벌꿀 생산액 3억 4,303만 달러(약 3,981억 원)를 능가했으며 캐나다, 호주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꿀벌의 화분 매개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벌꿀 생산보다는 양봉진흥법을 제정해 화분 수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우선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우리나라 양봉 농가에서는 벌꿀 생산 외에 추가적으로 화분 매개를 통한 가치 창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양봉인 단체에서는 자발적 납부에 의지하고 있는 양봉 자조금을 의무화해 무임승차 문제 해결과 함께 자조금을 이용한 적극적인 소비 촉진 홍보와 지속적인 양봉산업 조사 연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발표 기관에 따라 양봉산업 통계 수치가 차이가 있어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힘들어 장기 계획 수립에 지장을 주고 있다. 추가로 꿀벌 질병과 병해충 관리, 밀원식물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품질 등급 관리를 통한 제품 고급화로 수입산 꿀과의 차별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지광정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실천이 중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였으나 보행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 높은 39.7%이다. 이에 경찰은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슬로건을 내세워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첫째, 보행자 우선 정책을 추진해 도심

권 제한속도(50/30)를 하향 조정하고 협력단체, 유관기관 합동, 범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학교, 반상회,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진출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장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활동과 차량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 게시으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스마트 국민 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익신고 활성화 등 참여형 홍보를 통해 보행자 배려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넷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비추는 집중 조명시설인 투광기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설치·확대하는 등 시설개선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인식전환과 운전자로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행자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보행자 존중과 배려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보행자-운전자 양측 모두의 가슴속에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과 실천이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규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상철

부패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기지수첩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902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확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신고 처리,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중점을 뒀다.



박선옥
제2사회부 기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도는 4등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남도내 5개 시를 보면 광양시가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며 순천시 3등급, 나주, 목포, 여수시는 4등급에 그쳤다. 군 단위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장흥군과 고흥군, 완도군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고 장흥군의 경우 전국 꼴지의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순천시는 부정부패에 대한 내·외부 신고 활성화 등 구체적인 자정 기 능을 마련한 것은 높이 살 만하다. 전남도를 비롯해 22개 시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상·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하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반)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	편집인 金善勇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경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0	기획실 (062) 720-1005	기자제도		
경제부 (062) 720-1066-67	기획실 (062) 720-1005	논설실 (062) 720-1032	•TEL (062) 720-1050-54		
사회부 (062) 720-1050-54	논설실 (062) 720-1032	월간국 (062) 720-1006-07	•FAX (062) 720-1080-82		
사회2부 (062) 720-1043-45	관리국 (062) 720-1012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E-mail jndn@chol.com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판매국 (062) 720-1098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광고문의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 업 국 (062) 720-1011	사 전 부 (062) 720-1040	•TEL (062) 720-1016-17		
	광 고 국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주 주:전남매일신문사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